

동북아역사 리포트



Vol. 53

NORTHEAST ASIAN HISTORY REPORT

2023년 12월 1일

근현대 중국의 종주권 개념 변용과 한중관계 인식

이동욱_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중국 역사교과서에 등장한 종번관계론
2. 전근대 중국 '종주권'에 대한 오해와 실제
3. 근대 중국의 민족주의와 종주권 개념의 착종
4. 21세기, 다시 종주권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근현대 중국의 종주권 개념 변용과 한중관계 인식

이동욱_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중국 역사교과서에 등장한 종번관계론

2019년부터 중국 고등학교 국정 역사 교과서로 채택된 『중외역사강요(中外歷史綱要)』에서는 명·청 시대 이후 조선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경제·문화의 발전 정도의 차이로 인해 명·청 시대 중국과 주변 일부 국가 간에 종번관계(宗藩關係)라고 하는 국제 체계가 형성되었다. 일부 주변 국가들은 명·청 조정에 ‘납공칭신(納貢稱臣, 공물을 바치고 스스로를 신하라 부름)’을 하고 명·청 황제의 책봉을 받으며 명·청 황제의 연호를 사용했다. 종주국(宗主國)은 번속국(藩屬國)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계는 무력을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조선·류큐·베트남·미얀마 등 여러 국가는 모두 중국과 이러한 관계를 형성했다. 1879년 일본이 류큐를 병합한 이후 이러한 종번관계는 점차 해체됐다.

- 『歷史: 中外歷史綱要(上)』, p.98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래 중등 역사 교과서에서 ‘종번관계(宗藩關係)’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서 종번관계란 종주국(宗主國)과 번속국(藩屬國)의 관계를 가리킨다. 해당 교과서는 이 관계가 중국의 문화적, 경제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중국과 주변국 사이에서 형성된 군신관계로 무력에 의한 강압적인 관계가 아닌 평화적이고 자발적으로 형성된 관계라고 주장한다. 중국 주변의 이적(夷狄, 오랑캐)들이 우수한 중화 문명을 흠모하여 스스로 조공을 바치며 중국 황제의 신하가 되고, 중국 황제는 덕으로써 그들을 다스린다는 고대 중국의 천하관을 반영한 서술이다. 이러한 주장은 온전한 역사적 사실이라 볼 수 없다.¹ 명과 고려, 조선의 조공관계는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가는 알력과 왕조 교체, 정변 등을 겪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고등학교 국정 역사 교과서 『중외역사강요』 표지

뒤에야 정착되었으며, 청과 조선의 조공관계는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을 통해 형성되었다. 명 왕조는 초기에 베트남을 군사적으로 정복하여 직접 통치했다가 베트남인의 저항 끝에 조공관계로 전환하였다. 청 왕조와 베트남의 응우옌 왕조, 구르카(네팔), 미얀마 등과의 조공관계 역시 무력충돌을 경험한 뒤 형성되거나 정착되었다.

그럼에도 중국의 중등 역사 교과서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서구 제국주의의 산물인 근대 국제질서와 대비되는 중국의 우월성과 중심적 역할을 전제로 한 평화적인 국제질서로 이미지화하려는 것이다. 주변국을 ‘번속국’으로 거느리며 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던 중국의 형상을 부각하는 서사가 교과서에 수록된 것은 시진핑 시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려하게 만든다.

종번관계의 강조는 단순히 중국 또는 중화 문명의 우월성과 전근대 중국 중심 아시아 질서의 평화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위 인용문에서도 ‘종주국이 번속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서술은 있으나 ‘번속국’이 ‘종주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독립된 국가인지, 종속된 국가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한 온라인에서 확인되는 네티즌들의 시각이나 일부 학자의 견해에서는 소위 ‘번속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중국에 종속되어 있었으며, 중국이 이들의 내정에 개입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인식이 현실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2017년 4월,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used to be a part of China).”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이후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중국과 한반도의 역사적관계를 길게 설명했다고 한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1 그동안 국내의 역사학계는 역사속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중심의 일원적인 국제질서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중국은 우월한 선진 문명을 바탕으로 중국을 침략한 이민족들을 다양한 수준으로 중국 문화에 동화, 즉 ‘한화(漢化)’시켰다는 중화주의적인 인식에 기초한 조공체제론과 종번관계론, 천하체계론 등을 꾸준히 비판해왔다. 다극체제론과 정복왕조론, 호한체제론, 최근의 신청사 관련 논의들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중국 중심의 거대 역사 서사에 가려진 여러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복원하고,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된다.

중국 정치인들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역사적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역사 인식이 어떻게 현재의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2. 전근대 중국 ‘종주권’에 대한 오해와 실제

역사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일부분이었다는 주장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역사 해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20여 년 전의 동북공정에서 비롯된, 현대 중국 영토 안에서 일어난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라는 해석이다. 이를 토대로 중국 학계는 현재 중국의 동북 지방과 한반도 북부에서 활동했던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를 고대 중국의 소수민족 정권으로 설명하고, 한국사와의 관련성을 부정한다. 현재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창조된 이러한 역사 인식이 유사 이래 한국과 중국 역사서가 이들 국가와 한반도에서 성립한 고려, 조선의 계승 관계를 승인해 온 것과 모순되는 억지스러운 것이라는 것은 이미 충분히 비판되어 왔다.

둘째, 중국 한나라 때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漢四郡)을 설치한 사례, 당나라 때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설치한 사례, 원나라 때 한반도에 정동행성(征東行省)을 설치한 사례를 근거로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사군과 안동도호부의 초기 위치와 이동 경로, 성격 등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정동행성은 사실상 고려 국왕이 겸직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실제 원나라의 행정기구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수백 년, 천 년 이상의 오래된 과거에 이웃 나라를 정복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그 나라의 역사를 자국사의 일부라 주장하고 이를 토대로 현실 국제 정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주로 비판하고자 하는 ‘종번체제’ 이론이다. 앞의 두 가지 논리는 1천여 년 이상의 과거, 최소한 600년 이상의 과거사에 대한 해석에 기반한다. 그러나 종번체제 논리는 고대부터 100여 년 전까지의 과거 전체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주권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현실 국제 정치에 활용하기에는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종번관계론을 바탕으로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인식하는 것은 현대에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국제질서를 ‘번속’이나 ‘속국’과 같은 종속성이 두드러지는 용어로 설명하면서 나타나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청 왕조에서 19세기 말 조선을 위시한 조공국을 둘러싼 열강과의 체제 경쟁 속에서 서양 국제법 속의 종속국(dependent state) 개념을 모방하여 조공국을 ‘속국’ 또는 ‘속방(屬邦)’이라 의도적으로 종속성을 강조하고, 20세기 이후 중국인이 전통적 조공 질서 속의 국가와 국

가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서구식 기준의 종속과 독립의 이분법적인 잣대로 해석한 결과이기도 했다.

주변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인식하고, 중국이 과거에 이들 국가의 종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 ‘주권’의 근거로 인식하는 사고방식은 20세기 초 중국에서도 유행한 적이 있다. 당대의 쑨원(孫文), 장제스(蔣介石) 같은 지도자들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시아 질서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100년 전 제국주의가 유행하던 시대의 역사 인식이 21세기 중국에서 부활하여 주변국의 역사와 주권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언설이 난무하는 현상은 시대를 역행하는 위험한 징후로 보이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평화 공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21세기 중국에서 종번체제 이론이 유행한 것은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를 조공체제(tribute system)로 설명했던 미국의 역사학자 페어뱅크(John King Fairbank)에 대한 반향이었다. 종번체제론을 지지하는 이들은 고전적인 조공체제론이 조공이라는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치적 관계, 특히 유교적인 군신 관계와 위계질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번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 중 일부는 종종 전근대 중국 왕조와 주변국의 관계를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국제 질서라기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동아시아의 종번체제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교적 군신 관계 이념을 근거로 하므로, 서양 주권 국가 체제와 달리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할 수 있듯이 종주국이 번속국에 간섭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과거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대한 현대적이고 중국 중심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역사적으로 한반도 국가들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가 오랜 기간 중국과 조공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왔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공 관계를 넘어서 어떤 국가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려면 과거 역사에서도 중국인이 해당 국가를 중국의 일부로 인식하고, 주변국에서도 자국을 중국의 일부라 인식했어야 한다. 과연 역사 속의 중국인들은 고려나 조선을 중국의 일부로 여겼을까? 이를 정확히 규명하려면 중국인의 국제 관계에 대한 언설에서 이념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전근대 중국 왕조, 특히 명나라와 청나라는 조선을 조공국(朝貢國), 외번(外藩), 번속(藩屬), 번봉(藩封), 속국(屬國) 등으로 불렀고, 조선 역시 이를 인정하였다. 이는 한중 양국의 당시 사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호칭이 곧 조선이 중국의 일부였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중국에서 속국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했으며, 명·청 시대에 속국은 중국 황제와 군신(君臣)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 왕이 자율적으로 지배하는 나라를 의미했다. 이념적으로는 온 천하에 천자의 땅이 아닌 곳이 없고, 천자의 신하가 아닌 사람이 없어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황제의 통치력이 미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등장한 제도가 조공과 책봉이었다. 책봉을 통해 외국 군주의 통치권을 인정해주는 대신, 해당 군주가 중국의 책력을 사용하고 조공을 바침으로써 중국 황제는 이념적으로 천하의 ‘대일통(大一統)’을 이룬 ‘천자(天子)’가 될 수 있었다. 또 현실적으로는 두 나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주변국을 속국, 번속국, 조공국이라고 지칭하더라도 이들 국가는 엄연히 독자적인 통치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중국 황제의 지배를 받는 지역이 아니었다.

물론 이념을 현실로 구현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강력한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따라서 중국 역대 통치자들은 대개 외교 문서 형식과 조공, 책봉 등 의례를 통하여 중화 질서 속 ‘천조(天朝)’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구축하는 것에 만족하였다. 주변국이 중국의 이러한 전략을 적절히 이용하기도 하였다. 조선은 중국과의 외교 교섭에서 종종 ‘자소(字小, 작은 나라를 아끼고 보호해줌)’를 요구하며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다. 이는 중국 황제에게 조선 국왕의 ‘사대(事大, 큰 나라를 섬김)’의 대가로 자소를 베풀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여기는 점을 이용한 외교 전략이었다. 그러나 ‘자소’가 서양식의 보호국과 피보호국의 관계는 아니어서, 중국은 자의적으로 ‘자소’의 범위와 실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9세기 열강의 동아시아 진출 당시 청나라의 반응이었다. 청나라는 열강이 자국의 조공국을 잠식해 들어가는 것에 거의 대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공사가 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부인하면서 조선을 정복하겠다고 선언한 것에도 반발하지 않았다. 청나라는 이전부터 조선의 ‘자주’를 강조하였고, 당시에는 제삼자로서 프랑스-조선 사이의 중재를 제안했을 뿐이었다.

청나라는 운요호 사건 때에도 조선에 일본과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적절히 타협할 것을 권유하였다. 조선 스스로 「조일수호조규」(1876)를 체결하도록 자주성을 인정하였고, 사후에도 조선이 ‘자주지방(自主之邦)’으로서 일본과 대등하다고 규정한 제1조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병인 양요 전후 등장한 ‘자주’는 현대적 의미의 ‘자치(autonomous)’가 아닌 주권의 보유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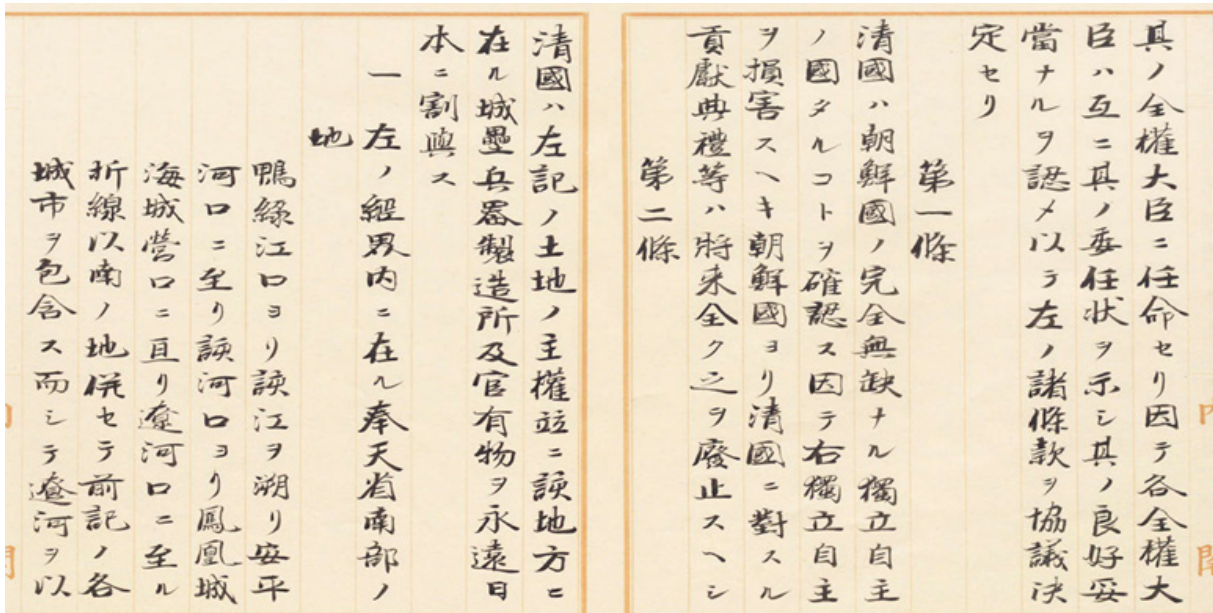


조선에 대한 간섭 정책을 총괄 지휘한 청나라 북양대신 리홍장(좌), 조선에 파견되어 간섭 정책을 수행한 위안스카이(우)

독립을 의미한다. 『만국공법(萬國公法)』(1864)과 『성초지장(星輶指掌)』(1876) 등 이 시기에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되어 출판된 서양 국제법 서적들은 공통적으로 주권국가(sovereign state)를 자주지국(自主之國)이라 번역하고 서양의 주권(sovereign), 독립(independent) 등의 용어를 자주(自主)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 정부는 조선을 사실상 독립국이라 주장하며 조선과 열강의 충돌에 휘말리는 것을 회피한 것이다. 조선 측에서는 오히려 사대자소(事大字小)의 외교 전략을 활용하여 병인양요 시기 프랑스 함대의 침략, 제너럴셔먼호 사건, 일본의 정한론 등에 대해서 ‘자소’의 실천, 즉 열강과 일본의 침략 위협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청 정부는 조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청나라가 자국의 ‘속방’이라는 이유로 조선 문제에 간섭하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부터였다. 서양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쌓은 뒤에야 조선이 완전한 주권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자국에 불리하다고 여기고, 조선은 청의 통제를 받는 반주권 국가(semi-sovereign state)라는 이미지를 연출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 조선은 이미 주권 국가로서 일본뿐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과도 국교를 체결하고 있었다. 게다가 조선과 서양 열강의 국교 수립은 청이 전략적으로 권유한 결과였다.

조선이 주권 국가로서 세계 각국과 수교하도록 도우면서도 청의 종주권을 강조하는 청 정부의 이러한 모순된 시도는 결국 고종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반발에 부딪혔다. 청은 조선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 외교, 재정, 군사, 상업, 통신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자국이 인정한 조선의 자주, 즉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부정하지도 않았다. 청일전쟁(1894~1895)까지 조선의



청일전쟁의 결과 체결된 「시모노세키조약」 일본어판. 제1조에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독립자주의 나라임을 확인하고, ... 조선의 청국에 대한 공물과 전례 등은 장래 전부 폐지한다.”라고 선언하였다.

국제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동아시아의 조공 질서를 실질적인 종속 관계로 왜곡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3. 근대 중국의 민족주의와 종주권 개념의 착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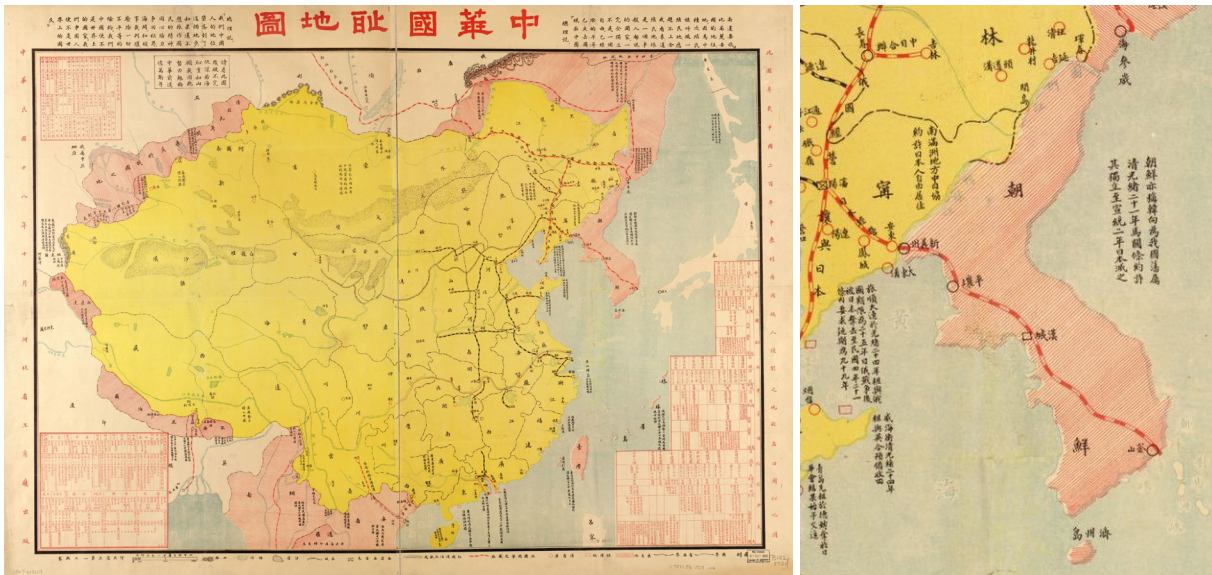
그렇다면 중국인들이 한국을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오해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이는 동아시아의 전근대 국제 질서를 서양 근대 주권 국가 체제의 프레임에 맞추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아편전쟁(1839~1842) 이후 영국과 프랑스를 선두로 하는 서양 제국주의 세력은 소위 조약 체제로 대표되는 자신들의 국제 질서를 동아시아에 단계적으로 강요하고자 하였다. 중국과 일본은 이에 대응하려고 여러 종류의 서양 국제법 서적을 번역하여 근대 서양의 국제 관계에서 통용되는 준칙들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국의 권익을 지키고자 하였다. 초기 과정에서 서양에서 속국(vassal state), 보호국(protectorate), 종속국(dependent state), 식민지(colony)를 가리키는 개념들을 동아시아에 이미 존재하던 번속, 번방, 속국, 속방 등의 용어로 번역하였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번속 또는 속국이라 부르던 나라들, 즉 조공국들은 서양식 종속국이나 식민지처럼 중국에 종속된 존재로 인식될 여지를 남겼다.

이와 같은 개념상 오해와 혼동 속에서 중국의 조공국은 점차 중국에 종속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사실 1870년대까지만 해도 청나라 관료들은 조공국들을 중국이 지켜주어야 할 중화제국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베트남과 조선 정도를 제외하면, 미얀마, 태국, 류큐 같은 나라들은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돕는 데 국력만 소모되고 오히려 열강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차라리 단절하는 게 낫다고 보았다. 그러나 1880년대에 들어서면 청 조야에서 이들 국가를 속국 또는 속방이라 부르며 종주권을 강력히 주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조선에 대해서는 자주성을 존중하던 기존 관계를 조정해서 서양 열강이 속국이나 식민지를 관리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청나라의 조공국에 대한 종주권 강화는 결국 청불전쟁(1884~1885)과 청일전쟁(1894~1895)의 굴욕적인 패전을 겪으며 무산되었다. 그러나 1880년대 이후 중국인의 역사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베트남과 조선을 둘러싼 전쟁에서 청이 패배함으로써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던 나라들을 열강에게 침탈당했다는 인식이 심화되었고, 이 나라들을 외세에 빼앗긴 영토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세기 초반 중화민국에서 유행한 「중화국치지도(中華國恥地圖)」는 이러한 인식의 산물이다. 이 지도는 19세기 이래 중국이 열강에게 ‘상실한 토지’를 붉은 빛금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한반도와 동남아시아의



「중화국치지도.(1929) 당시 중국이 '상실한 토지'라고 인식하던 지역을 붉은색으로 표시하였다.(좌) 「중화국치지도.(1929) 한반도 부분은 "조선은 한(韓)이라고도 부른다. 예전에 우리의 번속(藩屬)이었는데, 청나라 광서21년(1895) 마관조약(馬關條約, 시모노세키조약)에서 그 나라의 독립을 허락했다. 선통 2년(1910)에 이르러 일본이 멸망시켰다."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우)

베트남, 미얀마, 태국, 네팔, 부탄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는 과거 자주적인 존재였던 청나라 조공국들을 당시의 민족주의적 필요에 따라 외세에 빼앗긴 중국 영토의 일부라 왜곡하고 선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치(國恥)를 겪기 이전의 중국을 더욱 위대했던 것으로 묘사하면서 주변 국가는 중국의 일부처럼 표현한 것이다.

4. 21세기, 다시 종주권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주변국이 역사적으로 자국의 속국이었다는 역사 인식과 그에 기반한 언설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일정 부분 억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민족주의적 역사 교육이 강화된 결과, 21세기 들어서 다시 대두되고 있다. 그 결과가 앞서 언급한 교과서상의 '중변관계'에 대한 서술, 그리고 현실 국제 질서에 대한 대안으로서 조공체제론이나 천하체제론 등을 제시하려는 중국 사상계의 시도들이다.

중변관계론을 이용해 중국의 역사적 주권을 한반도까지 확장하려는 일부 학자들의 논의는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 명·청 시대의 조선이 중변관계의 모델 국가였다고 주장하며, 청나라가 조선을 '우리의 조선(我朝鮮)'이라 불렀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종주국이 번속국에 대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

럼 보호와 간섭의 의무 및 권리를 가졌다고 말한다. 평상시에는 주변국에 대해 ‘다스리지 않음으로써 다스리는(以不治治之)’ 정책을 펼치지만, 유사시 내정 간섭을 실시할 권한이 있었다는 궤변이다. 종변관계론이 역사상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근대 동아시아의 종주권 문제를 학술적으로 충실히 연구하고, 중국의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이동욱 |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사연구소 연구위원. 중국 근현대사 전공.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19세기 말 청의 조선 정책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근대 한중관계사, 근대 중국의 국제법 수용 및 주변국 정책 등을 공부하고 있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격약'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보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 제31호**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 제32호**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 제33호**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 제34호**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사라진 '강제(forced)'
- 제35호** 일본제국 전쟁사에 비추어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전략 평가
- 제36호** 시진핑 3기와 천하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
- 제37호**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기원과 전개 과정
- 제38호** 음식도 발효를, 생각도 발효를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
- 제39호** 돌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 대외관계사
- 제40호**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과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 제41호** 2023년 검정 통과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 제42호**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화해를 위한 공동 교과서 프로젝트
- 제43호** 고구려의 대당방어체제(對唐防禦體制)와 645년 전쟁
- 제44호** 한국인의 여름 나기, 삼계탕의 연원과 발달
- 제45호** 베트남 역사와 대중(對中) 관계
- 제46호**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과 한중일 삼국
- 제47호** 몽골 지폐 도안에 담긴 역사와 국가 정체성
- 제48호** 16세기 한중 관계와 예의지교(禮義之交)
- 제49호** 관동대지진 100주년 -관청 기록의 봉인과 '민중 폭력'의 재검증
- 제50호** '한중호조'의 아름다운 기억 -1920년대 한중 관계의 역사 속에서 상호협력(互助)의 교훈을 찾는다
- 제51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 배경 토틀아 읽기
- 제52호** 중국의 백두산 문화 유적 및 내러티브에 대한 중국화 시도